

# 2050, 통일 한국의 경제적 미래<sup>14)</sup>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통일연구실 TF

## I.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

한국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 내수 경기 부진의 장기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방지를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 통일은 한국의 인구 구조나 부족한 자원, 좁은 내수 시장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줄 뿐 아니라 경제권 확대 등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 한국의 경제력을 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과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이라는 2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추정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통합에 의한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 시너지 효과로 남북한 모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 통일 한국은 1인당 실질 GDP 약 7만 달러, 실질 GDP 약 5조 3천억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12위권의 경제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둘째, 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 효과와 더불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된다는 시나리오 하에 통일 한국의 경제력을 추정해 보면, 2050년 통일 한국은 1인당 실질 GDP 약 9만 2천 달러, 실질 GDP 규모 약 6조 9천 억 달러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일본,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의 경제 규모이다.

## II. 성장회계로 본 산업의 구조적 변화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동시에 북한의 중공업 발전이 남한의 중공업 비중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는 전체 경제규모가 큰 남한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비중이 2020년 57.8%에서 2050년 68.6%로 지속적인 확대가 전망된다. 또한 중공업의 비중은 남한과 같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겠지만, 북한 중공업의 성장으로 인해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4)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이장균·주원·홍순직 수석연구위원, 김민정·이해정·예상한·장우석 연구위원, 김천구·이용화·조규립 선임연구원, 오준범 연구원이 공동 작성.

### III.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산업

정부 주도의 계획개발 초기 단계는 생산 기반시설 확충, 도시 및 산업단지 정비를 통해 본격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로 인프라 관련 산업(① 건설, ② 전력/에너지, ③ 유·무선 통신, ④ 자원개발, ⑤ 교통/물류)이 빠르게 발전할 전망이다. 인프라 및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면 남한의 민간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상호보완적으로 융합되며 생산재, 중간재 산업(⑥ 기계, ⑦ 소재, ⑧ 환경/바이오)이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 증가 및 소득 수준 향상으로 잠재수요가 유효수요로 전환되면서 소비재 및 서비스 관련 산업(⑨ 가전, ⑩ 자동차, ⑪ 항공우주, ⑫ 관광)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IV.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과 통일에의 시사점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은 과거에 비해 대내 경제개혁을 촉진시키고, 대외 개방정책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경제운영시스템 강화 측면에서 내각 등 경제부처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회생 우선 정책은 남북한 경제력 격차 해소 및 북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 투자비용' 등 통일비용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북한은 인센티브와 자율성 도입 확대 등 시장경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농업·경공업 부문의 회생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장경제 전환에 따른 부작용 완화와 남북 간 이질적인 제도를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제도통합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개방 확대 측면에서 맞춤형 특구정책으로 외자유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개방 정책은 국제 수준에 맞는 법·제도 정비는 외자유치를 통한 자본 확충은 물론, 북한경제의 글로벌 경제 편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맞춤형 경제특구 정책은 지역의 생산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며,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인프라 개선은 통일인프라 조성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 V. 정책 대응 방향

통일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적 미래 달성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협력과 노력 뿐 아니라 대내외 공감대를 확대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남북한 공동의 통일 한국 비전 모색 및 단계적 실현 방안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통일 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소득격차 축소 및 통일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북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 발전 로드맵 준비 및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을 위한 생산·물류·시장 구축·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확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여섯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 한국의 정치·경제적 편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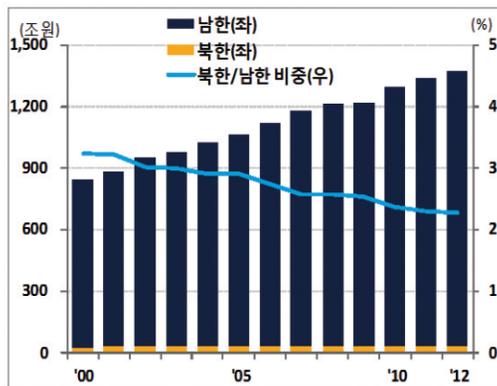
## 1.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

### 개요

2013년 현재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남한의 약 3.6% 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이다. 2012년 북한의 실질 GDP는 30.5조원으로 남한의 2.3% 수준에 불과하며, 2013년 남한의 1인당 명목 GDP는 2만 3,838달러로 세계 33위, 북한은 854달러로 세계 162위 수준이다.<sup>15)</sup>

2012년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는 남한의 1970년대 산업구조와 유사한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구조이다.<sup>16)</sup> 2012년 북한의 산업별 생산액 비중은 1차 산업 37.4%, 제조업 비중 21.9%(경공업 6.7%, 중공업 15.2%), SOC 산업 11.3%, 서비스부문 29.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남한은 2012년 서비스업 비중이 58.9%, 중공업 27.2% 등 산업구조가 서비스 및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이다. 북한의 인민경제부문별 노동인구는 1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남한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북한의 1차 산업 노동인구는 511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41.9%를 차지하며, 서비스업이 361만 명으로 29.6%, 제조업이 288만 명으로 23.7%를 차지하고 있다. 남한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1,718만 명으로 69.6%를 차지하며 제조업 410만 명으로 16.6%를 차지하나 1차 산업 종사자는 154만 명으로 6.3%에 불과하다.

〈 남한 및 북한의 실질 GDP 〉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0년 가격 기준.

〈 남한 및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IMF.

15)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주평』,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 참고.

16) 1차 산업은 농림어업과 광업을 포함하며 SOC 부문은 전기가수도업과 건설업을 의미. 제조업 중 경공업은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섬유, 가죽제품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을 의미.

남북한 양측은 모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일 한국의 잠재력 추정을 통해 통일한국의 경제 위상을 살피고자 한다. 남북한 양측은 모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한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세계 경제 부진 속 경쟁 심화에 따르는 외수 부진, 가계부채 급증 및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에 의한 내수 기반 약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북한도 1990년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별다른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남북한 통합은 양측 모두에게 획기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노동력 및 내수 시장 확대, 광물자원 활용도 증대, 산업 재배치에 따르는 시너지 극대화, 식량 및 에너지 안보력 제고, 한반도 경제권 확대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 확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등에 의한 외부효과 극대화 와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

〈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

(%)

구분	북한		남한	
	1990	2012	1970	2012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차 산업	36.4	37.4	30.7	2.8
제조업	31.8	21.9	18.5	31.1
경공업	6.2	6.7	11.2	3.9
중공업	25.6	15.2	7.4	27.2
SOC	13.7	11.3	6.4	7.9
서비스업	18.0	29.4	44.3	58.2

자료 : 한국은행.

주 : 북한은 명목GDP 대비 비중, 남한은 명목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을 의미.

〈 남북한 산업별 취업자 비중 비교 〉

(단위:만명, %)

구분	북한		남한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전산업	1,218	100.0	2,468	100.0
1차 산업	511	41.9	154	6.3
제조업	288	23.7	410	16.6
경공업	132	10.9	78	3.1
중공업	156	12.8	333	13.5
SOC	58	1.8	185	7.5
서비스업	361	29.6	1,718	69.6

자료 : 통계청.

주 : 1) 북한 2008년, 남한 2012년 기준.

2) 북한은 인민경제부문별 노동인구를 산업에 맞게 재조정함.

## 통일 한국 경제력 추정의 주요 가정

### 선행연구<sup>17)</sup>

남북 통합 효과에 대한 연구는 골드만삭스와 통일부 등에서 발표한 문헌이 있다. 골드만삭스(2009)<sup>18)</sup>는 통일 경제의 장기 전망을 크게 전환 단계(2013~2027), 공고화 단계(2028~2037), 성숙 단계(2038~2050)의 3단계로 구성하고

17) 추정을 위한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가정도 매우 간단함.

18) A united korea? -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2009, Goldman Sachs).

있다. 북한의 실질 GDP는 통일 초기 1~7%대로 성장하고, 이후에는 단계별로 2%씩 하락, 남한은 통일 이후 실질 GDP가 5년간 2% 증가하고 5~10년간 4% 성장한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 성장률에 수렴한다고 한다. 남한의 실질GDP는 2010년 1,062조원에서 2050년 2,812조원으로 증가, 북한의 실질GDP는 2010년 28조원에서 2050년 215조원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통일 한국의 1인당 GDP는 2010년 13,000달러에서 2050년 86,000달러로 증가한다고 한다. 통일부(2011)<sup>19)</sup>는 통일 시나리오를 단기형(10년 준비+통일 10년 후 경제공동체 완성), 중기형(20년 준비+통일 10년 후 경제공동체 완성), 장기형(30년 준비+통일 10년 후 경제공동체 완성)으로 구분한다. 통일 후 10년 간 남한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단기형(2020~2030년) 4.7%, 중기형(2030~2040년) 3.2%, 장기형(2040~2050년) 2.3%로 추정하고, 통일 후 10년 간 북한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단기형(2020~2030년) 18%, 중기형(2030~2040년) 16%, 장기형(2040~2050년) 11.5%로 추정한다.

## 추정 시나리오 및 시나리오별 가정

### ① (시나리오 1 :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

남북한 통합으로 한반도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나, 동북아 주요 지역 등지로의 통합 한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남한경제는 자본재 부문을 중심으로 한 생산과 투자 증대, 인구구조 개선, 생산성 향상 효과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증가한다. 단, 초기 통일비용 부담으로 단기적인 경제 성장세 약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도시화, SOC, 산업기반 정비 등에 필요한 자본재 생산 증가와 함께 관련 부문 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내수 부문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북한 가계 부문의 내구재 수요 증가로 남한 내구재 산업 활성화 기대는 물론 남북한 통합으로 자원 및 에너지 안보가 증대될 것이다. 남한의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노동 투입 규모도 다소 상승할 것이다. 통일을 계기로 남한의 법제도, 규제 등의 선진화가 더욱 촉진되고, 규모의 경제 효과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단, 통합초

19)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 구상(2011, 통일부).

기에는 통일비용 부담으로 일시적인 투자 감소 현상을 경험할 것이다.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개방효과가 발생하면서 고도성장한 후 중장기적으로는 고수준으로의 노동 생산성 향상, 산업 구조 고도화 등으로 남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개방효과가 발생하여 고도성장을 경험할 것이다. 노동 투입 부문에서는 전체 인구의 대규모 노동 시장 유입이 촉진될 뿐 아니라 노동 생산성이 매우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북한은 통일과 동시에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유입을 통해 도시화, SOC, 경공업 중심의 산업 발전 등 경제 전반의 개혁이 동시 진행될 것이다. 북한의 법제도, 규제 등의 선진화 추진, 시장경제 도입에 따르는 전환효과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의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의 향상,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남한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초기 유입된 대규모 노동력의 생산성이 남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산업구조도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첨단산업으로 고도화가 진전될 것이다. 법제도, 규제 등의 선진화 달성, 시장경제 안정화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고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다만, 해외 투자 및 노동력 유입, 북한의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와 같은 역내 경제권 확대 효과 등 외부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 해외직접투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제한적 유입이 예상된다. 북한의 중국, 러시아 등 접경지역 및 몽골 등지로부터의 노동 유입 효과도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 시나리오 1 :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의 부문별 주요 가정 〉

구 분	남 한	북 한
고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효과로 인구구조 개선</li> <li>•북한개발 수요 부문 중심 고용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의 대규모 노동시장 유입</li> <li>•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극적인 전환</li> </ul>
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개발 관련 자본재 부문 투자 증가</li> <li>•북한 가계 내구재 수요 증가 대응형 생산 및 투자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유입</li> </ul>
소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 및 고용 증대로 소비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빠른 소득 수준 상승으로 소비 급증</li> </ul>
생 산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효과로 법제도 및 규제의 선진화 촉진</li> <li>•통일에 의한 규모의 경제 확대 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사회 운영체계 전반의 시장경제화 및 민주화에 의한 장기 고수준의 생산성 향상 효과 향유</li> </ul>
외 부 효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한국의 경제에 대한 미래 불안감 상존</li> <li>•대외 투자 유입 효과 미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한국의 경제에 대한 미래 불안감 상존</li> <li>•대외 투자 및 노동 유입 효과 미미</li> </ul>

② (시나리오 2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한반도 단일 경제권 효과 및 북한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 한민족 경제권 형성, 유라시아지역으로의 SOC 연결 등 한반도 경제권의 영향력 확대 등에 따른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으로 통합한국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장기 고성장 뿐 아니라 동북아 및 동남아시아 한민족 경제권 형성, 유라시아지역과의 경제적 연계 강화 등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 증대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상승할 것이다.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 역내 경제권 형성이 예상된다. TSR, TCR, 아시아 하이웨이 등의 교통·물류 분야 SOC 확장 등에 의해 유라시아까지 경제권이 확장될 것이다. 가스파이프라인 등 자원·에너지 분야 SOC연결 등을 통해 관련 분야 리스크 상쇄 등으로 해외직접투자와 노동력의 유입과 같은 외부효과의 극대화도 기대된다. 북한의 중장기 고성장을 바탕으로 내수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북한의 중장기 고성장에 필요한 수요 부문별 투자와 고용이 증대하는 한편 소비도 동반 증가할 것이다. 통일한국 경제는 리스크 소멸로 북한 접경지역 개발이 가속화되고, 접경지역을 둘러싼 동북아 역내 시장 확대로 수출 부문의 투자와 생산이 확대될 것이다. 남북한 통합으로 동북아 역내 물류 효율성 증대 등의 시너지도 발생할 것이다. 통합초기 통일비용 부담으로 일시적인 투자 감소 현상을 경험하나, 경제 리스크 해소와 동북아 및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 등에 따르는 해외 직접투자 유입 증가로 이를 상쇄할 것이다.

북한도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으로 통일한국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면서 빠른 산업구조 고도화, 노동 투입 증가, 대규모 해외직접투자 유입 가속 등에 의해 경제 규모가 장기간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북한 경제의 개방화·시장화로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 개발이 빠르게 활성화되는 등 역내 경제권 통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북한의 접경국가들인 중국, 러시아 뿐 아니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접경지역의 산업기지화는 물론 주변 도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로 인해, 동북아 주요국들 뿐 아니라 주변국들로부터의 투자와 노동 유입은 물론 시장 확대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남

북한 교통·물류·에너지망 연결 등에 따르는 자원 및 에너지 관련 SOC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유발할 것이다. 북한의 산업구조도 경공업 중심의 완만한 산업 구조 전환이 아니라 동시 다발적인 형태로 빠르게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제 규모의 획기적인 확대를 유발할 것이다.

특히,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에 따르는 외부효과 극대화가 기대된다. 통일 한국의 안정 성장을 바탕으로 한 북한 접경지역 개발 가속화, 동북아 및 동남아 한민족 경제권 형성 등으로 한반도 경제권이 확대될 것이다. 유라시아 전체로 연결되는 교통·물류·에너지망의 구축 등으로 한반도와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경제 통합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유라시아 전체가 하나의 역내 경제권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투자와 노동 이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북한은 남북한 통합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광물자원 등 부존자원 보유,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 몽골과 유럽 등 대규모 배후 소비 시장 보유 등의 이점 뿐 아니라 남한의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로부터의 투자는 물론 노동 유입이 활발해질 것이다.

〈 시나리오 2 :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의 부문별 주요 가정 〉

구 분	남 한	북 한
고 용	•북한의 중장기 고성장 파급영향에 따른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확대	•노동시장 급팽창에 의한 현재 및 미래 노동 투입 규모 증가
투 자	•북한의 중장기 고성장에 필요한 수요 부문별 투자 증대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관련 SOC 등 투자 증대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유입 •고성장 지속에 의한 투자 여력 증대
소 비	•투자 및 고용 증대로 소비 증가	•빠른 소득 수준 상승으로 소비 급증
생산성	•통일효과 및 경제권 확대에 따른 법제도 및 규제 선진화 촉진, 규모의 경제효과 극대화	•시장경제화 및 민주화에 의한 장기 고수준의 생산성 향상 효과 향유 •경제권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극대화
외부효과	•통일한국의 경제 리스크 소멸 •해외직접투자 유입 가속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으로 시장 확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유입 •중국, 러시아, 몽골, 동남아 등지로부터의 노동 유입 증가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으로 시장 확대

주 : 본 가정에는 '시나리오 1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의 주요 가정이 포함됨.

## 통일 한국의 경제력 추정 결과

### 시나리오별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추정

#### ① 경제성장률

남한의 성장률은 통합 초기에 통일비용 부담 증가로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낮은 정체기를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약 1.0~1.5%p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남한의 성장률은 2015~20년에 연평균 3.0%까지 하락한 후 2021~30년 4.5%, 2031~40년 3.7%, 2041~50년 2.8%씩 성장할 것이다.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남한의 성장률은 2015~20년에 연평균 3.5%까지 하락한 후 2021~30년 5.0%, 2031~40년 4.2%, 2041~50년 3.3%씩 성장할 것이다.

북한은 풍부한 투자자금 유입과 산업 재건으로 인한 상승효과 등으로 고도성장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성장률은 2015~20년에 연평균 10.1%, 2021~30년 9.7%, 2031~40년 7.9%, 2041~50년 6.2%씩 성장할 것이다.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성장률은 2015~20년에 연평균 14.8%, 2021~30년 12.1%, 2031~40년 9.8%, 2041~50년 8.2%씩 성장할 것이다.

통일 한국은 남한의 중장기적인 통합 시너지와 북한의 고도성장으로 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통일 한국의 성장률은 2015~20년에 연평균 3.2%, 2021~30년 4.7%, 2031~40년 4.0%, 2041~50년 3.1%씩 성장할 것이다.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통일 한국의 성장률은 2015~20년에 연평균 3.8%, 2021~30년 5.4%, 2031~40년 4.7%, 2041~50년 4.0%씩 성장할 것이다.

#### 〈 남한, 북한 및 통일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 전망 〉

구분	시나리오 1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			시나리오 2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남한	북한	통일 한국	남한	북한	통일 한국
2015~20년	3.0%	10.1%	3.2%	3.5%	14.8%	3.8%
2021~30년	4.5%	9.7%	4.7%	5.0%	12.1%	5.4%
2031~40년	3.7%	7.9%	4.0%	4.2%	9.8%	4.7%
2041~50년	2.8%	6.2%	3.1%	3.3%	8.2%	4.0%

주: 기간평균.

## ② 실질GDP

남한 경제는 초기 부진을 만회하고 중장기적으로 실질GDP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남한의 실질GDP는 2015년 1,469조원에서 2020년까지 성장이 다소 정체되겠지만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50년 5,114조원을 기록할 것이다.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남한의 실질GDP는 2050년에 6,082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다.

북한의 실질GDP는 남한의 과거와 체제전환국의 사례처럼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실질GDP는 2015년 35조원에서 통일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50년 549조원을 기록할 것이다.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실질GDP는 2050년에 1,276조원까지 증가하여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호주에는 조금 못 미치나 멕시코보다 높은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통일 한국은 남한의 통합 시너지와 북한의 빠른 성장으로 거대 경제권이 형성될 것이다.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통일 한국의 실질GDP는 2015년 1,504조원에서 2050년 5,663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통일 한국의 실질GDP는 2015년 1,513조원에서 2050년 7,358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 〈 남한, 북한 및 통일 한국의 실질GDP 전망 〉

(단위 : 조원)

구분	시나리오 1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			시나리오 2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남한	북한	통일 한국	남한	북한	통일 한국
2015년	1,469	35	1,504	1,476	36	1,513
2020년	1,722	56	1,778	1,773	72	1,845
2030년	2,679	141	2,819	2,892	227	3,119
2040년	3,862	301	4,163	4,376	581	4,957
2050년	5,114	549	5,663	6,082	1,276	7,358

주 : 2010년 가격 기준.

### ③ 1인당 실질 GDP

남한의 소득 수준은 초기에 증가속도가 지연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향상될 것이다.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남한의 1인당 실질 GDP는 2015년 27,227달러에서 2050년 94,792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남한의 1인당 실질 GDP는 2015년 27,360달러에서 2050년 112,734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 최빈국중 하나인 북한은 소득 수준이 중진국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1인당 실질 GDP는 2050년 20,785달러로 증가하여 남한의 2012년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다.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1인당 실질 GDP는 2050년 48,353달러로 증가하여 중진국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

통일 한국의 소득 수준은 빠르게 성장하여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다.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의 경우 통일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2015년 18,715달러에서 2050년 70,484달러로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이다.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의 경우 통일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2015년 18,826달러에서 2050년 91,588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 〈 남한, 북한 및 통일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전망 〉

(단위 : 달러)

구분	시나리오 1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			시나리오 2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남한	북한	통일 한국	남한	북한	통일 한국
2015년	27,227	1,311	18,715	27,360	1,376	18,826
2020년	31,916	2,118	22,128	32,856	2,729	22,961
2030년	49,649	5,326	35,091	53,610	8,602	38,827
2040년	71,588	11,405	51,821	81,108	22,010	61,697
2050년	94,792	20,785	70,484	112,734	48,353	91,588

주 : 1) 인구는 남한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 북한은 통계청의 북한 인구추계(1993~2055년)를 이용.  
2) 2010년 가격 기준.

## 통일 한국 경제의 세계 위상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통일 한국은 2050년에 세계 12위 수준의 경제력 보유할 것이다. 통일 한국의 경제가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시나리오’에 따라 성장할 경우, 달러화 기준 실질GDP는 2050년에 5조 2,925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남북한이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수준에 도달할 경우 통일 한국은 2050년에 세계 7위의 높은 경제력을 보유할 것이다. 통일 한국의 경제가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에 따라 성장할 경우, 달러화 기준 실질GDP는 2050년에 6조 8,767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 2050년 세계 경제력 순위 비교 〉

구분	2011년		2050년			
	국 가	실질 GDP (십억 달러)	시나리오 1 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		시나리오 2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국 가	국 가	국 가	국 가
1	미국	15,094	중국	48,477	중국	48,477
2	중국	7,298	미국	37,998	미국	37,998
3	일본	5,867	인도	26,895	인도	26,895
4	독일	3,571	브라질	8,950	브라질	8,950
5	프랑스	2,773	일본	8,065	일본	8,065
6	브라질	2,477	러시아	7,115	러시아	7,115
7	영국	2,432	멕시코	6,706	<b>통일 한국</b>	<b>6,877</b>
8	이탈리아	2,195	인도네시아	5,947	멕시코	6,706
9	러시아	1,858	독일	5,822	인도네시아	5,947
10	인도	1,848	프랑스	5,714	독일	5,822
11	캐나다	1,736	영국	5,598	프랑스	5,714
12	스페인	1,491	<b>통일 한국</b>	<b>5,293</b>	영국	5,598
13	호주	1,372	터키	4,486	터키	4,486
14	멕시코	1,155	이탈리아	3,867	이탈리아	3,867
15	<b>남한</b>	<b>1,116</b>	스페인	3,612	스페인	3,612
16	인도네시아	847	캐나다	3,549	캐나다	3,549
17	터키	773	나이지리아	3,451	나이지리아	3,451
18	사우디아라비아	577	사우디아라비아	2,977	사우디아라비아	2,977
19	폴란드	514	호주	2,603	호주	2,603
20	아르헨티나	446	아르헨티나	2,333	아르헨티나	2,333

자료 : 2011년 국가별 GDP는 World Bank, 2050년 국가별 GDP 전망은 PWC<sup>20)</sup> 자료 인용, 2050년 통일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임.

20) World in 2050-The BRICs and beyond : prospec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2013. 1, PWC).

## II. 성장회계로 본 산업의 구조적 변화

### 남북한 산업구조 현황

2012년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 산업구조와 유사하게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sup>21)</sup> 2012년 북한의 산업별 명목 부가가치 비중은 1차 산업 37.4%, 제조업 21.9%(경공업 6.7%, 중공업 15.2%), SOC·건설 부문 11.3%, 서비스업이 29.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12년 남한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 2.8%, 제조업 31.1%(경공업 3.9%, 중공업 27.2%), SOC·건설 부문 7.9%, 서비스업이 58.2%를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 및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산업별 종사자 비중 측면에서도 북한의 인민경제부문별 노동인구는 1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남한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북한의 1차 산업 노동인구는 511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41.9%를 차지하며, 서비스업이 361만 명으로 29.6%, 제조업이 288만 명으로 23.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남한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1,718만 명으로 69.6%를 차지하고 제조업은 410만 명으로 16.6%를 차지하나, 1차 산업 종사자는 154만 명으로 6.3%에 불과하다.

〈 남북한 산업별 명목부가가치 비중 현황 〉  
(%)

구분	북한		남한	
	1990	2012	1970	2012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차 산업	36.4	37.4	30.7	2.8
제조업	31.8	21.9	18.5	31.1
경공업	6.2	6.7	11.2	3.9
중공업	25.6	15.2	7.4	27.2
SOC·건설	13.7	11.3	6.4	7.9
서비스업	18.0	29.4	44.3	58.2

자료 : 한국은행.  
주 : 북한은 명목GDP 대비 비중, 남한은 명목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을 의미.

〈 남북한 산업별 취업자수 및 비중 현황 〉  
(단위:만 명, %)

구분	북한		남한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전산업	1,218	100.0	2,468	100.0
1차 산업	511	41.9	154	6.3
제조업	288	23.7	410	16.6
경공업	132	10.9	78	3.1
중공업	156	12.8	333	13.5
SOC·건설	58	1.8	185	7.5
서비스업	361	29.6	1,718	69.6

자료 : 통계청.  
주 : 1) 북한 2008년, 남한 2012년 기준.  
주 : 2) 북한은 인민경제부문별 노동인구를 산업에 맞게 재조정함.

21) 1차 산업은 농림어업과 광업을 포함하며 SOC·건설 부문은 전기가수도업과 건설업을 의미. 제조업 중 경공업은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섬유, 가죽제품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을 의미.

##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 추정

###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 추정 방법 및 가정

통일 한국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산업별 성장 경로를 각각 추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통일 한국의 산업 구조 변화를 추정한다. 남한과 북한의 산업 부문을 '1차 산업', 제조업 중 '경공업'과 '중공업', 'SOC·건설', '서비스업'의 총 5개 부문으로 나누고, 각 산업별 성장경로는 자본스톡과 노동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각 생산요소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생산함수 방식을 통해 추정한다.<sup>22)</sup> 2015년에 통일이 되는 것을 가정한 후 추정결과를 토대로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의 산업구조 변화를 전망한다. 북한의 요소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와 국민소득수준이 유사한 1975년 이후 남한의 성장경로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통일로 인한 추가적인 시너지효과를 고려한다.<sup>23)</sup> 북한의 자본스톡은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유입을 통해 노후화된 자본스톡의 교체와 신규자본 축적이 급격히 진행될 것이다. 노동투입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극적인 향상과 인구의 대규모 노동시장 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종 제도와 시장의 효율성이 개선되어 1970년대 남한을 능가하는 총요소생산성을 유지할 것이다. 남한의 요소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은 소득수준이 비슷하고 통일의 효과가 내재되어 있는 1991년대 이후 통일 독일의 성장경로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통일로 인한 추가적인 시너지효과를 고려한다. 남한의 자본스톡은 통일 초기 통일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본투자 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이후 북한에 필요한 자본재 생산 증가와 함께 자본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노동투입은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벗어나기 어렵지만, 북한으로의 투자확대로 인한 경제 활성화로 외부에서의 노동투입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일로 인해 각종 제도와 시장의 선진화가 촉진되고 내수시장의 규모의 경제 효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될 것이다.

###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 추정 결과<sup>24)</sup>

#### ① 북한 산업구조 추정 결과

북한의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을 전망한 결과 통일 후 모든 산업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공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이 빠를 것으로

22) 구체적인 추정 방법 및 가정은 [별첨1, 2] 참조.

23)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은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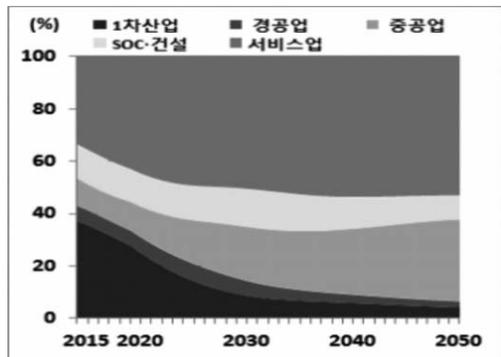
전망된다. 북한의 GDP증가율은 통일 후 5년 간 10.1%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 후 2021~2030년 9.7%, 2031~2040년 7.9%, 2041~2050년 6.2%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 보면 중공업은 통일 후 2040년까지 1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2040년 이후 8.5%로 성장률이 감소할 것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통일 후 5년 간 약 15%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이후 11.0%, 8.6%, 6.1%로 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SOC·건설 부문은 통일 초중반기 북한으로의 집중 투자로 인해 2030년까지 10%에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2030년 이후 5.9%, 3.1%로 급락할 것이다. 1차 산업은 통일 후 5년 간 2.6%, 2021~2030년 -1.3%, 2031~2040년 3.9%, 2041~2050년 2.7%로 북한의 전체 경제성장률을 밀돌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을 토대로 북한의 산업구조를 전망해 본 결과 향후 중공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차 산업은 2020년 25.0%, 2030년 8.7%, 2040년 6.0%, 2050년 4.3%로 비중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고, 경공업 역시 2020년 6.0%로 현재 수준이 유지되다 2030년 5.6%, 2040년 3.2%, 2050년 2.4%로 비중의 급격한 감소가 전망된다. 중공업은 2020년 11.7%에서 2050년 31.3%로, 서비스업은 2020년 44.9%에서 2050년 53.3%로 비중이 증가하여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OC·건설 부문은 2020년 12.4%, 2030년 14.3%로 일정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다가 2050년에는 8.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전망 〉 (%)      〈 북한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 〉 (%)

구분	2015~2020년	2021~2030년	2031~2040년	2041~2050년
전산업	10.1	9.7	7.9	6.2
1차 산업	2.6	-1.3	3.9	2.7
제조업	12.9	14.1	8.7	8.0
경공업	10.9	9.0	1.9	3.1
중공업	13.9	16.1	10.1	8.5
SOC·건설	9.0	11.3	5.9	3.1
서비스업	15.2	11.0	8.6	6.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체 부가가치 대비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의미.

24)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에서 제시하는 시나리오1(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을 기준으로 추정. 시나리오2(유라시아 경제권 확장)의 산업별 비중 결과치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시나리오1 기준과 큰 차이가 없음.

## ② 남한 산업구조 추정 결과

남한의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은 통일 효과로 2020년까지 1차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이 상승하였다가 2050년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의 GDP 증가율은 통일 후 5년 간 3.0%에서 2021~2030년 4.5%로 증가했다가 2031~2040년 3.7%, 2041~2050년 2.8%로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1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2030년까지 상승한 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중공업은 통일 직후부터 2020년까지 2.9%에서 2021~2030년에는 4.3%까지 성장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2041~2050년 2.0%로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서비스업은 2030년 이후 부가가치 증가율이 하락하나 하락폭이 다른 산업에 비해 낮아 통일 후 2050년까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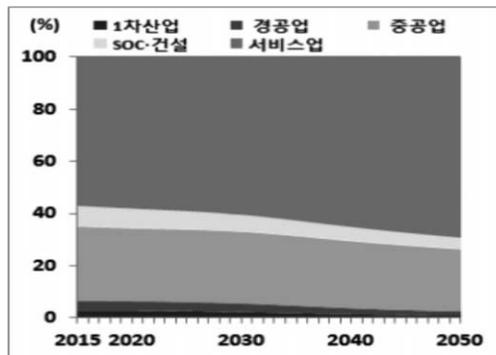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을 토대로 남한의 산업구조를 전망해 본 결과 향후 서비스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에 따라 전체 부가가치 대비 비중이 2020년 57.9%, 2030년 60.3%, 2040년 65.0%, 2050년 69.1%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공업 비중은 2020년 28.1%에서 2050년 23.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산업과 경공업의 비중은 2050년에 각각 0.9%, 1.6% 수준으로 하락하고, SOC·건설 부문 역시 4.5%로 축소가 예상된다.

〈 남한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전망 〉  
(%)

구분	2015~2020년	2021~2030년	2031~2040년	2041~2050년
전산업	3.0	4.5	3.7	2.8
1차 산업	2.7	2.2	-1.1	-1.6
제조업	2.9	4.3	2.8	1.8
경공업	2.4	3.7	0.3	-0.5
중공업	2.9	4.3	3.0	2.0
SOC·건설	2.3	3.0	1.9	0.9
서비스업	3.6	4.9	4.5	3.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

〈 남한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체 부가가치 대비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의미.

③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 추정 결과

통일 한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은 중공업과 서비스업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 한국의 전체 GDP 증가율은 3.4%, 4.7%, 4.0%, 3.1%로 2030년까지 상승세로 나타나다가,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북한의 중공업 및 서비스업의 빠른 성장세가 2030년 이후 남한의 중공업 및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하락을 일정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중공업 및 서비스업의 전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3.4%, 4.4%를 기록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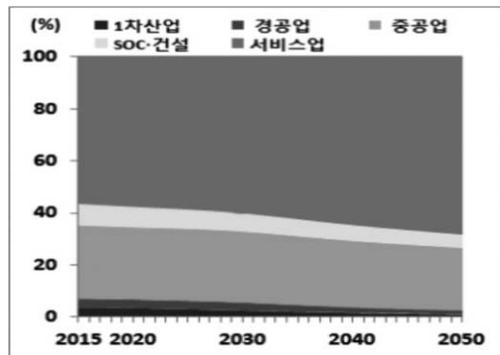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는 동시에 북한의 중공업 발전으로 남한의 중공업 비중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는 전체 경제규모가 큰 남한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2020년 57.8%, 2030년 60.3%, 2040년 64.9%, 2050년 68.6%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일 한국의 중공업 비중은 남한과 같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겠지만, 북한 중공업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통일 한국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전망 〉  
(%)

구분	2015~2020년	2021~2030년	2031~2040년	2041~2050년
전산업	3.4	4.7	4.0	3.1
1차 산업	1.9	1.4	-0.5	-0.9
제조업	3.1	4.5	3.0	2.3
경공업	2.7	3.8	0.3	-0.2
중공업	3.1	4.6	3.3	2.5
SOC·건설	2.4	3.4	2.3	1.1
서비스업	3.8	5.2	4.7	3.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

〈 통일 한국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체 부가가치 대비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의미.

통일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

통일 한국 산업구조 변화의 특징으로는 첫째,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소프트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

은 통일 직후인 2015년 56.7%에서 2050년 68.6%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통일 후 내수시장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고 1인당 소득 수준 향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산업구조의 소프트화, 고도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할 것이다. 둘째, 통일 한국의 제조업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한국의 경공업과 중공업의 비중은 통일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 각각 1.6%, 24.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중공업의 비중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북한지역의 SOC·건설부문은 2030년 초반까지 비중이 증가하면서 통일 초기 북한의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지역의 산업구조에서 SOC·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일 직후 13.0% 시작으로 2031년 14.4%(추정 기간 중 최대 비중)로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통일 초기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질 대규모 SOC·건설투자의 결과로, SOC·건설투자 및 비중 증가는 통일 초기 북한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중공업과 서비스업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북한지역의 산업구조는 중공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통일 이전 북한의 주요산업이었던 1차 산업과 경공업이 사양산업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지역의 산업구조에서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일 직후 9.9%에서 2050년 31.3%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남한으로부터의 SOC·건설투자 및 기술이전과 북한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이 결합되면서 중공업 부문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유라시아 대륙의 수출시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1차 산업과 경공업 비중의 경우 2050년까지 각각 4.3%, 2.4%로 감소하면서 통일 전 북한 경제의 주요산업에서 사양산업으로 이동할 것이다. 다섯째, 남한의 산업구조는 서비스 산업 중심의 발전이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이 둔화되던 중공업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 경제는 북한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물류, 교육, 의료, 기술개발분야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지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기계설비, 부품소재 등의 생산이 남한지역 중공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남한의 서비스업 및 중공업과 북한의 중공업이 조화를 이루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산업구조로 재편될 것이다.

### 【별첨 1】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 추정 방법

통일 한국의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전망치 추정을 위해 개별 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성장회계를 이용한다. 산업별 성장회계는  $Y_{i,t} = A_{i,t} K_{i,t}^{(1-\alpha_j)} L_{i,t}^{\alpha_j}$  와 같은 1차 동차 콥-더글라스 형태의 산업별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이를 로그 차분하여 다음과 같이 각 변수의 성장률로 나타나는 산업별 성장회계식을 도출한다.

$$* \quad d\ln Y_{i,t} = d\ln A_{i,t} + (1 - \alpha_j) d\ln K_{i,t} + \alpha_j d\ln L_{i,t}$$

이때  $Y_{i,t}$ 는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K_{i,t}$ 는 산업별 자본스톡,  $L_{i,t}$ 는 산업별 노동투입,  $A_{i,t}$ 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alpha_j$ 은 기간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의미한다. 남한과 북한의 각각 생산요소 A, K, L의 성장률 전망치를 추정하고, 이를 성장회계식에 대입하여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전망치를 산출한다.

### 【별첨 2】 통일 한국의 산업구조 전망

남·북한 및 통일 한국의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

구 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차 산업	35.6	25.0	8.7	6.0	4.3
제조업	15.6	17.7	26.3	28.4	33.7
경공업	5.8	6.0	5.6	3.2	2.4
중공업	9.9	11.7	20.7	25.2	31.3
SOC·건설	13.0	12.4	14.3	11.9	8.9
서비스업	35.8	44.9	50.7	53.8	53.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체 부가가치 대비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의미.

〈남한의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

구 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차 산업	3.0	2.9	2.4	1.5	0.9
제조업	32.1	31.5	30.2	28.1	25.4
경공업	3.6	3.4	3.2	2.3	1.6
중공업	28.5	28.1	27.6	25.8	23.8
SOC·건설	8.0	7.6	6.6	5.5	4.5
서비스업	56.9	57.9	60.3	65.0	69.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체 부가가치 대비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의미.

〈통일 한국의 산업별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

구 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차 산업	3.7	3.4	2.5	1.6	1.1
제조업	31.6	32.1	30.4	27.8	25.6
경공업	3.6	3.5	3.2	2.2	1.6
중공업	28.0	27.6	27.2	25.6	24.0
SOC·건설	8.0	7.6	6.7	5.7	4.7
서비스업	56.7	57.8	60.3	64.9	68.6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전체 부가가치 대비 각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의미.

## Ⅲ.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산업

### 통일에 따른 경제활동 기반의 변화

통일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을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우리나라는 육로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사실상의 섬나라 처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육상 교역이 가능한 대륙 경제 국가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 및 소비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산업의 과밀화 문제가 해소되고 성장의 여유를 확보하여 동북아 경제권의 동반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는 단숨에 8,000만명에 근접하면서 노동시장과 내수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한 인구 강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인접해 있는 동북 3성, 1억 1,000만 인구를 포괄하는 동북아 경제권 형성으로 제2의 고속성장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토지, 지하자원, 산림, 해양, 수자원 등 다양한 국가 자원의 증가로 자원 빈국에서 자원 부국으로 변화함에 따라 경제성장의 토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첨단 산업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하락하고 자원 자주개발률이 향상되어 국가적 차원의 부가가치 생산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넷째, 통일 한국은 첨단 기술과 고효율 노동력의 결합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등 남북한의 생산요소가 상호보완적으로 융합되어 본격적인 시너지가 창출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동남아와 중국을 제치고 세계의 공장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통일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 쇠퇴기에 접어든 산업들의 수명주기(Industry life cycle)를 연장시켜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이 빠르게 회복되어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기업들의 유턴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은 개발도상국의 일반적 성장경로가 아니라 중간 단계를 뛰어넘어 단숨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도약(Quantum Leap)적 성장경로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주도로 질서 있는 계획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자본의 축적 과정이 생략된 채 대규모 자본이 즉시 투입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제약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고속 성장기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 산업분야에서 중간 단계를 뛰어넘어 21세기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기술적 도약이 가능하여 단숨에 고효율 친환경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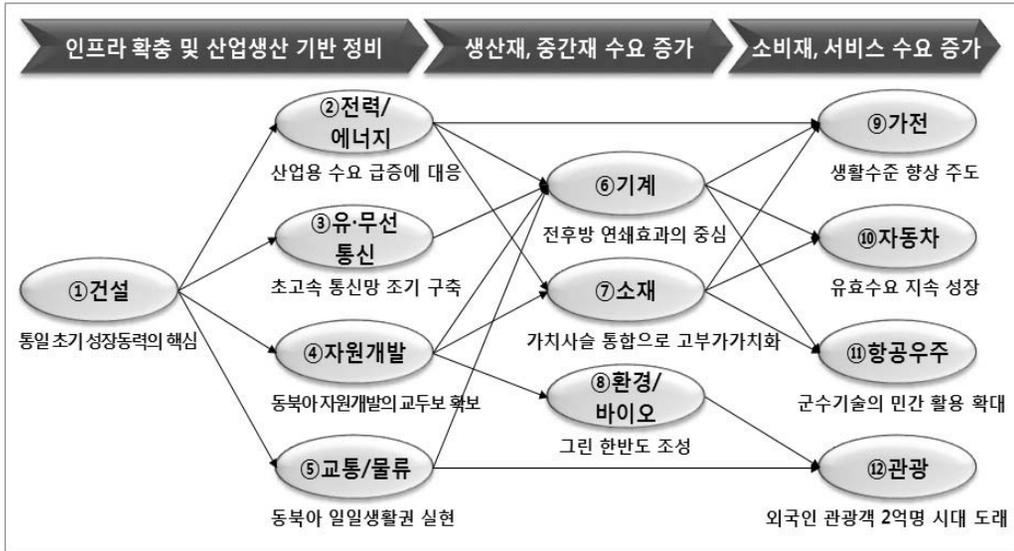
일곱째, 국방예산이 절감되고 군수기술의 민간 활용 촉진될 것이다. 과도한 국방비 지출 부담이 해소됨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투자여력이 확대되고 비군사적 분야에 대한 예산 배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수분야에서 축적된 연구개발 성과물이 민간 부문에서 상용화로 이어지면서 첨단 산업의 고속 성장을 추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통일 이후의 산업발전 경로

통일 이후 국내 경제는 인프라 확충, 산업생산 기반 정비, 생산재 수요 증가, 소비재 및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다양한 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먼저, 정부 주도의 계획개발 초기 단계는 생산 기반시설 확충, 도시 및 산업단지 정비를 통해 본격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로 인프라 관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교통, 통신, 전력 등 SOC가 확충되고 도시화 및 산업 기반 시설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건설업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며, 에너지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발전 및 송배전 설비의 현대화 및 신규 발전설비 구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통신 강국인 남한과 후발주자인 북한의 결합이라는 이점을 살려 최신기술을 이용한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 단기간 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북동부 지역에 채광, 야금, 에너지 관련 복합단지를 건설하면 장기적으로 러시아, 몽골 자원 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도로 정비와 함께 철도 현대화 및 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과도 1일 생활권으로 연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통일 이후의 산업발전 경로 및 12대 유망 산업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인프라 및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남한의 민간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상호보완적으로 융합되며 본격적인 시너지가 발생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건설기계, 발전설비 등 전방산업뿐 아니라 자동차, 가전 등 후방산업 성장과 함께 ‘산업의 어머니’인 기계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강, 희소금속, 희토류 등 광물자원에 자본과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산업의 쌀’인 소재 산업도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청정기술을 활용한 녹색 한반도 조성, 상호보완적 농림어업 체계 구축으로 생태, 환경 및 바이오 산업 역시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고용 증가 및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잠재수요가 유효수요로 전환됨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및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전제품 등 내구 소비재의 생산 및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북한 지역 내 자동차 보급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북3성을 타겟으로 하는 자동차 생산기지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군비경쟁의 해소로 국방예산이 절감되고 군수기술의 민간 사용이 촉진됨에 따라 항공우주 산업도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관광산업의 경우, 남북한, 중국, 러시아와 연계된 관광 시장 확대에 일본을 비롯하여 동남아, 구주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권 동반 성장, 서비스업 발전으로 이어지며 12대 유망 산업을 넘어 전 산업으로 성장의 기회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북부지역의 빠른 경제 성장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지역 경제권의 동반 성장을 주도하며 한반도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 및 소득수준 향상, 국제화 진전에 따라 금융, 교육, 의료, 문화, 전문 서비스 등의 서비스업도 꾸준히 성장하게 될 것이다.

##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산업

### ① 건설 : 통일 초기 성장동력의 핵심

남한은 고속성장기를 지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건설업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북한은 만성화된 경제침체로 건설업 성장이 제약을 받고 있다. 남한의 건설업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침체되며 2010년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다가 2013년 플러스로 전환되며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대적인 규모로 볼 때 남한의 건설업 규모는 2012년 기준 56조 5,577억 원으로 북한 2조 5,794억 원보다 22배 크지만 성장이 한계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북한의 건설업은 2000~2005년까지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성장세가 약화되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9.8%까지 상승했다가 2012년 7.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계획개발 초기 단계부터 북한 지역의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경제 재건이 이루어짐에 따라 건설업은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구축, 교통·전력·에너지 인프라 구축, 주택 건설 사업은 침체기에 빠져 있는 남북한 건설업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독일 통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도로, 철도, 수로, 주

택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고, 건설업 관련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며 이는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sup>25)</sup> 통일 초기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질 대규모 SOC·건설투자는 통일 초기 북한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타 산업 발전의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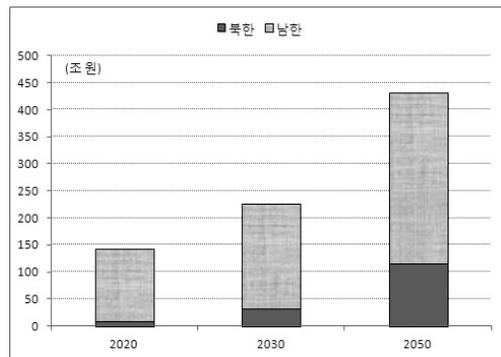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건설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개발 단계(2015~2020) 및 고속성장 단계(2021~2030)에 북한 지역의 건설업 성장률은 10.2%, 12.0%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안정성장 단계에 접어들면서 북한 지역의 건설업 성장률은 4.6%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업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전망 〉  
(단위: %)

	2015~ 2020년	2021~ 2030년	2031~ 2050년
통일한국	2.5	3.5	2.3
남한	2.3	3.0	1.5
북한	10.2	12.0	4.6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

〈 건설업 실질부가가치 규모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2010년 가격 기준.

## ② 전력/에너지 : 산업용 수요 급증에 대응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발전설비 및 발전량이 남한보다 앞서 있었지만 이후 남한이 화력과 원자력발전을 크게 늘리면서 추월에 성공하였다. 남한은 1980년대 이후 화력과 원자력 발전설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였으며, 2012년 현재 남한의 발전설비 규모는 북한의 11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남한이 화력발전 설비를 1965

25) 구동독 지역의 주택 및 비주택 등 건물의 건축허가 건수의 증감률 추이를 보면 통일 직후인 1992년에 전년 대비 383.7%, 1993년에 211.1% 증가하였고, 건축허가 건수도 1991년 5,484건에서 1996년에 18만 6,155건으로 급증하고 이에 따라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통일 이전에는 높았으나 통일 이후에는 1995년에는 건설에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북한 경제 및 건설시장에 관한 기초 연구', 2012).

년 55만kW에서 2012년 5,231만kW로 94배 늘릴 동안 북한은 28만kW에서 296만kW로 10.5배 증설하는 데 그쳤다. 또한 남한은 2,072만kW 규모의 원자력 발전설비를 확보했지만 북한은 상용 원전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남한의 발전설비는 1965년 77만kW에서 2012년 8,181만kW로 증가한 데 비해 북한의 발전설비는 같은 기간 239만kW에서 722만kW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일이 되면,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발전설비 확충이 이루어짐에 따라 북한 지역의 전력 생산량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 방식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환경문제 우려가 높은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보다 최신 청정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적 화력발전 설비 구축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력발전은 추가적인 댐 건설보다 기존 발전소의 설비 개선 및 부분적 확충에 주력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원전 건설은 환경, 안보 측면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석탄 자원을 활용한 화력발전 위주의 전력설비 확충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발전 및 송배전 설비 개보수를 통해 효율성이 남한 수준으로 개선되 기만 해도 발전량은 52.5%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 이후 2050년까지 북한 지역의 발전설비는 2012년 대비 8배, 발전량은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성장 단계(2021~2030)에 북한의 발전설비는 1,314만kW, 발전량은 716억kWh 수준에 도달하며, 2050년에는 발전설비 5,848만kW, 발전량 3,637억 kWh로 2015년 대비 각각 8배와 11배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 〈 통일한국의 전력량과 발전설비 추정 〉

	계획개발 단계 (2015~2020)		고속성장 단계 (2021~2030)		안정성장 단계 (2031~2050)	
	발전설비(천 kw)	발전량(억 kWh)	발전설비(천 kw)	발전량(억 kWh)	발전설비(천 kw)	발전량(억 kWh)
남한	97,600	6,100	121,920	7,620	130,560	8,160
북한	7,220	328	13,140	716	58,482	3,637
전체	104,820	6,428	135,060	8,336	189,042	11,79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③ 유·무선통신 : 초고속 통신망 조기 구축

남한은 높은 수준의 유·무선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북한에서는 2008년 이후 이동전화의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의 이동전화 누적 가입자 수는 2013년 5월 기준으로 5,400만명을 넘어서며 포화상태에 직면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이동전화 누적 가입자 수 증가율은 연평균 3.4%로 나타났다. 북한은 2008년 이집트 기업 오라스코미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낸 이후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08년 1,694명에서 2013년 약 200만 명으로 5년 만에 1,0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이 되면, 정보통신 강국인 남한과 후발주자인 북한의 결합이라는 이점을 살려 최신기술을 이용한 초고속 통신망이 단기간 내에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후발주자로서 최신기술에 의거한 통신수단의 도입이 유리하여 유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무선으로 통신 인프라가 점프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선 통신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통일 후 6~7년 내에 전 주민의 휴대전화 소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과 비슷한 소득수준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2000년대 들어와 폭발적인 무선전화가입자 수 증가를 경험한 바 있다. 북한과 1인당 GDP가 비슷한 코트디부아르, 케냐, 세네갈, 탄자니아, 잠비아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31.1배, 173.5배, 32.9배, 178배, 76.3배 증가하였다.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은 계획개발 단계, 고속성장 단계, 안정성장 단계에 진입하면서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 성장률은 계획개발 단계 12.5%, 고속성장 단계 8.3% 수준을 기록한 뒤 안정성장 단계에는 7.2%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통일 한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 성장률은 계획개발 단계 3.8%에서 고속성장 단계 3.4%, 안정성장 단계 2.9% 수준으로 점차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

〈 통일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 성장률 전망 〉

	계획개발 단계 (2015~2020)	고속성장 단계 (2021~2030)	안정성장 단계 (2031~2050)
통일 한국	3.8%	3.4%	2.9%
남한	3.4%	3.0%	2.8%
북한	12.5%	8.3%	7.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 ④ 자원개발 : 동북아 자원개발의 교두보 확보

북한 지역에는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유용광물 200여종)되어 있는 반면, 남한은 광물자원 매장량이 적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매장량 기준 북한 광물자원의 세계 순위는 마그네사이트 3위, 흑연 4위, 금 6위, 아연 7위 등이며, 국내 자급도가 낮고 개발 경제성이 기대되는 광종으로는 금, 아연, 철, 동,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인상흑연, 인회석, 무연탄 등이 있다.<sup>26)</sup> 반면 남한의 광산물 자급률은 2012년 기준 7.6%로 대외의존도가 높아 해외 자원시장의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통일 이후 한반도 북동부 지역에 채광, 야금, 에너지 관련 복합단지를 건설하면 장기적으로 러시아, 몽골 자원 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 원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제 광물 가격 상승 등 글로벌 공급 불안에도 수급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광물자원 수요분의 50%만 북한 지역에서 조달하더라도 연간 약 124억 달러의 수입 대체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산업의 기초 원자재인 철의 경우 내수 규모는 231.6억 달러에 달하지만, 자급률이 1%에 불과한데, 북한의 철 보유 규모는 8,775억 달러에 달해 내수의 50%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15.8억 달러의 수입 대체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지역에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도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희유금속의 개발·가공 관련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반도 북동부를 중심으로 광물자원 개발 및 가공산업을 추진하고, 항만, 발전소 등 인프라 개발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러시아, 몽골 자원 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남북한 주요 광물자원 비교 및 가용 연한 〉

	남한			북한	남한 수요분의 50% 북한 조달 시 가용 연한
	보유규모(억 달러)	내수규모(억 달러)	자급률(%)	보유규모(억 달러)	
금	18	14.1	4	857	122년
철	7	231.6	1	8,775	76년
마그네사이트	-	0.8	0	24,048	60,120년
인상흑연	2	0.2	0	30	300년
인회석	-	1.5	0	270	360년
합계	27	248.2		33,980	122년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보유 규모 및 내수 규모는 2011년 수입단가 기준.

26) 방경진, “북한 광물자원 현황 및 개발 실태”, 『북한 광물자원산업의 진출 전략과 전망 포럼』, 한국광물자원공사, 2011.

⑤ 교통/물류 : 동북아 일일생활권 실현

우리나라는 분단으로 인해 육상물류가 완전히 봉쇄됨에 따라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 채 본격 물류국가로의 발전이 가로막혀 왔다. 남한의 육상물류는 국내 여객 수송의 97.7%, 국내 화물 운송의 86.6%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제 육상물류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제1의 교역 상대국이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중국과의 육상 교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남한의 물류산업은 70~80년대의 고성장기를 지난 이후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물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반면 북한의 물류는 주철종도(主鐵從道)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對중국 교역은 단둥을 통한 교역이 70%를 차지해 육상 물류가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통일이 되어 고속철도가 한반도 전역과 동북아 지역을 1일 생활권으로 묶고 유럽철도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가 완성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 동쪽 관문을 지키는 물류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서울~신의주를 잇는 고속철도와 북경~선양~단둥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뿐만 중국 동북지방까지 1일 생활권으로 연결하게 될 것이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5시간대 연결로 한반도 1일 생활권 실현되고, 서울에서 금강산까지는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북경~선양~단둥 고속철도와 연결되면 한반도를 넘어 중국의 동북지방을 아우르는 1일 생활권이 실현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유럽철도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한반도종단철도(TKR)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가 완성되어 동해선은 TSR과 연결되고 경의선은 TCR과 연결되면 유라시아 차원에서 통합적 물류망 구축 및 경제통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물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0년 10%에 육박하며 국가 중추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통일 이후 물류 산업 전망 〉

(단위 : 조 원, %)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전체 물류산업 생산액	61	89	175	344	677
(GDP 대비 비중)	(4.0%)	(4.8%)	(5.6%)	(6.9%)	(9.2%)
육상물류 생산액	24	36	87	206	474
(GDP 대비 비중)	(1.6%)	(1.9%)	(2.8%)	(4.2%)	(5.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 ⑥ 기계 : 전후방 연쇄효과의 중심

남한의 기계산업은 1990년대까지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나 최근 국내 설비투자 위축 및 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남한의 일반기계산업은 1970년대에 연평균 24.7% 성장하였으며, 1980년대 17.6%, 1990년대 10.6%, 2000년대 7.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북한은 기계공업을 중공업의 핵심으로 중점 육성해왔으며, 기술적 측면에서 공작기계 산업은 타 부문에 비해 비교적 발전된 산업으로 평가된다. 기계공업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수공업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북한은 무기, 대형기계류 및 설비생산 부문에서 상당한 수준의 자립적 기술기반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CNC 공작기계에 의한 생산체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통일이 되면 전 산업에서 생산설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계산업은 고성장기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로 기계산업 생산 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다. 계획개발 초기 단계부터 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건설기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제조업 설비투자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공작기계도 산업 전반의 경기 상승에 따라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자동차, 조선 등 수송기계산업의 생산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수송기계 중간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경쟁력 향상과 함께 가격경쟁력 우위 요소가 결합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남한의 기계산업 수출은 범용 기계류 중심에서 NC선반 및 머시닝센터 등 고기능 기계류 위주로 전환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과의 가격경쟁력 격차가 좁혀져 왔으나 통일 이후 노동력, 원자재 등 원가 절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기계 산업은 2020년까지 연평균 8% 성장하고 이후 2050년까지 성장률은 단계적으로 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일반기계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2050년 287조원, GDP 대비 비중은 3.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 통일 이후 일반기계 산업의 성장 전망 〉

(단위 : 조 원, %)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부가가치 생산액	34	50	98	176	287
GDP 대비 비중	2.2	2.7	3.2	3.6	3.9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2010년 가격 기준 실질 생산액.

⑦ 소재 : 가치사슬 통합으로 고부가가치화

소재 산업은 제조업의 뿌리가 되는 산업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완제품 생산 능력이 평준화됨에 따라 첨단 소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남한의 소재 산업은 경제 발전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낮은 상황이며, 최근에는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위협에 직면해 있다. 남한의 소재 수출액은 2000년 세계 287억 달러로 세계 8위 수준에서 2011년 931억 달러, 세계 6위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3.9%에서 2011년 4.2%로 약 0.3%p 상승하였다. 한편 북한은 철광석, 비철금속, 비금속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금속공업 및 석탄화학공업 생산체계를 구축해왔다.

통일이 되면 소재 산업의 전후방 가치사슬이 통합되고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나라는 소재 수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경쟁력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소재 품목이 확대되고 수익성이 향상됨에 따라 소재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한의 소재 산업은 기술경쟁력 중심의 독일·일본과 달리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격경쟁력 우위 유형의 소재 수출은 2011년 기준 전체 소재 수출액의 61.7%를 차지하고 있는데, 통일 이후에는 가격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희유금속, 희토류 등을 원료로 하는 고기술,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기술경쟁력도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통일 한국은 2050년 세계 4위의 소재 수출 대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통일 한국의 소재 수출액은 2015년 136조원에서 2050년 3,830조원으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일본을 넘어서며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통일 이후 소재산업 성장 전망 〉

(단위 : 조 원, %)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생 산 액	351	566	1,340	2,892	5,690
내 수	215	346	770	1,415	1,859
수 출	136	220	569	1,477	3,83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 ⑧ 환경/바이오 : 그린 한반도 조성

남한은 농림어업의 비중이 낮지만 친환경 바이오 산업이 부상하고 있으며, 북한은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으나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남한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농림어업의 비중이 2.8%에 불과하나 바이오(BT) 산업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남한의 식량 자급률은 2012년 23.6%까지 하락하였으며, 쌀을 제외한 기타 식량작물은 자급률이 5% 미만으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바이오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6.4조원으로 추정되며 5년간 연평균 15.0%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을 겪은 이후 농업 생산량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북한 경제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4%에 달하며, 농가인구는 약 857만명으로 추정된다. 최근 북한은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유기농법을 통해 살충제와 화학비료 등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청정개발체제(CDM)를 활용한 녹색 한반도 조성, 상호보완적 농림어업 체계 구축으로 생태, 환경 및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 이후 한반도의 대기 및 수질 개선, 산림복원, 비무장지대(DMZ) 활용 협력 등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복원, 수력발전 등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비무장지대 일대의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 등이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청정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녹색 한반도 생태공동체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상호보완적 농림어업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환경 및 식량안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며, 북한 지역의 농업생산력 향상, 친환경 유기농법 확대, 전국적 차원의 쌀 수급구조 재편을 통해 식량 자급률 향상 및 환경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농림어업과 생명공학 기술의 상호보완적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식품, 생명자원,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 산업의 생산 규모는 2015년 약 10조원 수준에서 2050년에는 100조원 이상으로 열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 〈 통일 이후 국내 바이오 산업 성장 전망 〉

(단위 : 조 원)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생 산 액	9.9	14.8	30.8	60.0	109.4
내 수	5.6	8.4	17.4	33.9	61.8
수 출	4.3	6.4	13.3	26.1	47.6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㉑ **가전 : 생활수준 향상 주도**

남한의 가전제품은 생활 및 소비수준 향상에 따라 고급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기본 생활을 위한 가전제품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남한은 1980~1990년대 가전제품 보유가 급격히 증가하며 가전제품 보급률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해외 생산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전제품의 고급화와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에너지, 원자재의 부족으로 가전제품 생산활동은 미미한 수준이며 중국산 제품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은 2000대 후반 보급률이 크게 높아졌으며, 음향 및 영상기기 산업 역시 낙후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중국산 VCR, 디지털카메라 등의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이 되면,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로 가전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남북한 지역의 차별화된 생산 분업으로 가전제품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이후 남북한 가전 산업은 효율적인 생산 구조의 재배치로 인해 생산성 향상이 크게 이루어지고 내수 시장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보급형 제품과 고급형 제품의 차별화된 생산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한편, 북한 주민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가전제품 생산이 급증할 전망이다. 통일 직후에는 북한 지역의 가전제품 보급률이 급등하면서 보급형 가전제품 생산이 확대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고급화 제품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남·북한 생산 분업 시스템 확립으로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계획개발 단계(2015~2020)에 북한 지역의 가전제품 생산은 18% 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점차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통일 한국 가전제품 생산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전망 〉 (%)

	계획개발 단계 (2015~2020)	고속성장 단계 (2021~2030)	안정성장 단계 (2031~2050)
통일 한국	7.3	5.6	4.3
남 한	5.2	4.7	3.2
북한	18.0	11.5	5.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각 단계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

## ⑩ 자동차 : 유효수요 지속 성장

자동차 산업은 수많은 자재와 부품을 사용함에 따라 중간투입률이 높고 철강, 기계, 전자, 소재 등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산업으로 1970년대 이후 남한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주역이다. 남한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자동차 보급률도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300대를 돌파하였으며, 자동차 생산량은 452만대로 세계 5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남북합작기업인 평화자동차를 통해 완성차 조립, 생산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북한은 산업용 화물차 생산에 치중해왔으나 최근 승용차, SUV, 승합차 등을 조립,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자동차 생산량은 1965년 4,400대에서 1985년 18,500대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2013년 4,000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 후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약 1,000만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의 내수시장의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하였으나 북한 내수시장 및 인접 수출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2,500만 명의 내수시장 및 1억 1,000만 명의 동북3성 수출시장을 타겟으로 생산 거점 구축이 가능하며, 1인당 소득 수준 향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가 달성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접한 중국의 동북 3성은 지속적인 고속도로 건설 투자로 전체 물류량 중 고속도로 비중이 80% 이상까지 증대되어 향후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일 이후 5년 이내에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500만대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거의 1,0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020년대 2.9%, 2030년대 1.8%, 2040년대 1.7%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 통일 이후 자동차 산업 성장 전망 〉

(단위 : 만 대)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생 산	470	532	709	832	974
내 수	150	161	211	225	233
남 한	148	156	172	172	172
북 한	2	5	39	53	61
수 출	320	371	499	608	74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⑩ 항공우주 : 군수기술의 민간 활용 확대

항공우주 산업의 경우 남한은 위성활용, 지상장비, 위성체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 북한은 군수산업 및 발사체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북한의 시너지 창출로 인한 고도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중 하나이다. 남한은 우주산업을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다. 2012년 기준 남한의 우주 분야 활동금액은 1조 4,408억원 규모이며,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2001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2013년에는 3,475억원으로 세계 20위 수준에 도달하였다.<sup>27)</sup> 2013년 나로호 3차 발사 성공, 다목적실용위성 5호 및 과학기술위성 3호 발사 성공에 힘입어 우주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북한은 북한은 군수산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기술의 자체 개발을 추진해왔다. 2012년 12월에 발사된 우주발사체 ‘은하3호’는 인공위성 ‘광명성3호’를 궤도 위에 올려놓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통일이 되면, 군비경쟁의 해소로 국방예산이 절감되고 군수산업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spill-over)되면서 항공우주 산업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우주 산업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분야로 국가적 차원에서 콘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연구개발 및 실용화 사업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우주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통일 한국은 2020년 달탐사선 및 달궤도선 발사를 통해 우주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의 위성제작 및 우주활용 기술과 북한의 발사체 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하며 통일 한국의 우주산업 규모는 2050년 약 24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우주기기 제작 부문은 2015년 0.6조원에서 2050년 9.1조원으로 15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우주 활용 부문은 같은 기간 1.3조원에서 14.9조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sup>28)</sup>

〈 통일 이후 우주산업 성장 전망 〉

(단위 : 조 원)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우주기기 제작 (위성체, 발사체, 지상장비)	0.6	0.9	2.1	4.6	9.1
우주 활용 (위성활용, 과학연구)	1.3	2.0	4.2	8.3	14.9
합 계	1.8	2.9	6.4	12.9	24.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산업체 매출, 연구기관 예산, 대학 연구비 등 합산.

## ⑫ 관광 : 외국인 관광객 2억명 시대 도래

최근 남북한을 합친 전체 관광객 수는 1,140명, 관광산업 규모는 240억 달러로 세계 17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남한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9년 782만명에서 2012년 1,114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북한도 최근 적극적인 관광 진흥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09년 11~12만명 수준에서 2012년에는 26~30만명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연계된 관광시장 확대에 인근 국가와 동남아, 구주 관광객까지로 급격히 확대되어, 2050년 외래관광객 수는 최대 2억명, 관광산업 규모는 최대 2,5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한반도~중국 동북 3성~러시아 연해주 간의 극동 지역 관광이 활성화됨에 따라 일본을 비롯, 동남아 국가와 유럽 및 미주 국가의 관광객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지역의 자유로운 관광, 사업 목적의 관광 입국이 증가하고, 이에 대응한 관광 시설 및 인프라의 개선 및 확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내륙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한편, 자연 관광 중심에서 레저 목적의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관광산업이 본격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통일한국의 외래 관광객 수는 2020년 최대 3천만 명에 달하고, 지속적인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2050년에는 2억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일한국의 관광산업 규모는 2020년 최대 450억 달러에 달하고, 이후 관광 인프라 개선 및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관광객 수요 확대에 따라 2050년에는 2,50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 통일 후 한반도 관광객 수 및 관광산업 규모 추정 〉

구 분	계획개발 단계 (2015~2020)	고속성장 단계 (2021~2030)	안정성장 단계 (2031~2050)
외래 관광객 수 (만 명)	2,500~3,000	7,000~7,700	18,000~20,000
관광산업 규모 (억 달러)	350~450	800~900	1,600~2,5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각 단계별 최종 년도의 추정치를 의미.

27)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 (추경 예산 반영금액).

28) 우주 분야에 참여하는 산업체의 매출, 연구기관의 예산, 대학의 연구비 등을 합산한 금액.

## IV.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과 통일에의 시사점

### 개 요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변화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 논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주민생활 향상과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대내외적인 개혁·개방 확대를 추진 중이다. 김정은 제1비서는 최초의 대중연설(2012. 4. 15)에서 “다시는 주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주민생활 문제 해결에 주력했고,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은 대내적으로 내각책임제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과 기업소 부문의 인센티브와 자율권 확대 등 새로운 경제개혁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에 이어, 11월에는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설치 등의 경제개방정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 라면서 남북관계와 통일의 의미를 경제적 측면에서 강조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이며,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경제회생 및 주민지원에 방점을 둔 ‘드레스덴 구상’을 수립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통일 한국의 경제 대도약 발판을 구축하고자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 최근 북한 경제정책의 주요 특징

#### 경제 부처 권한 강화

북한은 주민생활 향상과 경제성과 제고를 위해 내각책임제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관료 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제부문 내각의 권한 강화를 통해 내각을 사실상의 ‘경제사령부’로 격상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집권 이후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내각책임제 강화를 밝히기도 했

다. 특히 2012년 ‘4.6 담화’에서는 내각에서 결정된 경제정책의 확고한 추진과 이를 위해 국가재정을 내각에 집중시킬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경제 부문에 대한 내각책임제 실시는 김정일 위원장 시대부터 강조되었지만, 당시에는 국방산업 우선 정책이 추진되어 온 바 있다.

다음으로 박봉주 내각총리를 비롯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sup>29)</sup> 당시 개혁·개방을 주도한 경제·기술관료 대부분을 재임용하여, 내각책임제의 추동력을 확보했다. 2013년 최고인민회의에서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기용하는 한편, 2002년 7.1 조치 당시의 핵심 인물인 노두철, 곽범기 등 경제 관료를 재임용 했다. 또한 2014년 최고인민회의에서 박봉주 내각총리를 유임하는 한편, 김정일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내각 총리의 현장 시찰을 공개적으로 보도 하기도 했다.

### 〈 김정은 체제 하의 내각책임제 추진 주요 내용 〉

일 자	주요 내용
2012.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당 중앙총 위원들과의 담화 (4.6 담화)</li> <li>• 내각책임제 및 내각중심제 강화 언급</li> <li>• 국가재정을 내각에 집중, ‘경제사령부’로서 내각의 권한 확대</li> </ul>
2013.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 경제 각료 대폭 교체</li> <li>• 경제개혁의 상징인 박봉주를 총리로 임용, 경제 전문가 대거 임명</li> <li>• 교체된 고위급 인물 27명 가운데 85%(23명)가 경제 전문가임</li> </ul>
2014.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 경제 각료 재신임</li> <li>• 박봉주 총리 유임,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 유임</li> </ul>
2014. 4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 최고인민회의 내각확대회의</li> <li>•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강조</li> </ul>

자료 : 각 언론매체 종합.

29)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경제난 해소, 2중 경제 개선, 국가 재정부담 경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격 및 임금의 인상, 노동생산성 향상, 배급제 개선,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등임.

### 시장경제 시스템 및 경쟁체제 도입

두 번째로, 최근 북한은 농업과 기업소 부문에 부분적 시장경제 시스템 및 경쟁체제 도입<sup>30)</sup>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 북한 당국은 농업 부문 개혁을 위해 2012년 6.28 조치를 실시했다. 6.28 조치는 협동농장 개혁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분조관리제 개선과 수확물의 자율처분권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분조관리제 확대로 분조별 생산성 평가를 통한 ‘차등분배’ 원칙을 확립했고, 이를 위해 종전 10~25명 단위 분조를 4~6명 단위로 축소하였다. 또한 7:3 제도 도입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자율처분권을 크게 확대해, 목표생산량을 초과 달성할 경우 생산량의 70%는 국가가, 30%는 목표생산물 초과 분조에 처분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다음으로 기업소 부문의 개혁을 위해 2012년 12.1 기업소 개혁 조치를 실행했다. 12.1 조치는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품을 결정하고, 가격과 판매 방법, 수익·배분도 자체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독립채산제 확대는 기존에 제한적으로 실시되던 지배인<sup>31)</sup> 책임경영제를 대폭 증대시켜 각 기업소가 독자적인 생산 계획, 인원, 설비 등을 자율적으로 책임지게 한 조치이다. 차등 임금제 시행은 기존 동일 임금 적용에서, 노동시간과 기여도 등에 따른 성과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일한 만큼 수익금을 차등 분배하는 방식이다.

#### 〈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의 ‘경제관리개선조치’ 비교 〉

일 자	김정일 체제 (2002년 7.1 조치)	김정은 체제 (2012년 6.28, 12.1 조치)
농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조관리제 실시</li> <li>• 분조규모, 10~25명</li> <li>- 초과생산물 자율처분권 사후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조관리제 전면 확대(분조 축소)</li> <li>• 분조규모, 4~6명</li> <li>- 초과생산물 자율처분권 대폭 확대</li> <li>• 생산량의 70%(국가), 30%(분조)</li> </ul>
기업소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적 지배인 책임경영제 실시</li> <li>- 제한적 임금 인센티브제 도입</li> <li>• 사실상 기업소, 분조별 동일임금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배인 책임경영제 전면 확대</li> <li>- 차등 임금제 전면 도입</li> <li>• 성과급 중심 분배(최고 100배 차등)</li> </ul>

자료 : 각 언론매체 종합.

30) 농업부문의 6.28조치와 기업소 부문의 12.1조치의 경우 북한의 공식발표가 없음. 본 내용은 일본의 조선신보를 비롯해 국내외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정리한 것임.

31) 우리의 기업 경영자, 공장장에 해당됨. 북한의 지배인은 공장, 기업소의 경제관리운영의 모든 문제들을 결정함.

## 외자유치 촉진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은 외자유치와 수출 확대를 위해 ‘경제개발구법’ 제정 등의 법·제도 정비와 함께 외자유치기구를 정비하고 특구정책도 확대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경제특구 관련 법·제도를 집중적으로 제·개정하였다. 우선 외자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련 14개 법제를 집중적으로 제·개정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공산권의 몰락으로 인한 경제난 해소를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외자유치 관련 법·제도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외국인투자법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미흡, 대외 신뢰도 악화, 낙후된 산업 인프라 등으로 성과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최근 외국투자기업의 재산보호, 3통(통행·통신·통관)의 자유보장, 지적재산권 보호, 신변안전보장 등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제·개정하였다. 또한 2013년 5월 29일 채택된 경제개발구법은 북한 전역에 걸쳐 경제특구 확대가 핵심 내용이며, 단일 법 규정에 근거하여 외자유치를 도모하는 경제특구가 운영되는 것은 최초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당 위원장과 인민위원장이 주도권을 갖는 경제개발구 설치가 가능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데 의미가 있다.

### 〈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경제특구 관련법 정비 현황 〉

일 자	주요 내용
2011. 11. 29	- 합병법, 합작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토지임대법 개정
2011. 12. 3	-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 제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 • 우편, 전화, 팩스 자유로운 이용, 외국인투자 자산의 국유화 금지,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 취득 가능까지 범위를 확대, 소득의 송금, 투자재산 반출 자유 보장
2011. 12. 21	- 외국투자은행법,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인투자기업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개정
2013. 5. 29	- 경제개발구법 제정 • 경제개발구는 크게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 • 특성별로는 공업, 농업,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로 구분

자료 : 각 언론매체 종합.

두 번째로는 본격적인 경제특구 확대를 위한 외자유치 기구로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신규로 출범시켰다. 북한 당국은 2013년 10월 16일 ‘국가경제개발10개년 전략계획’ 수행을 위해 설치했던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시켰다. 이는 기존의 국가경제개발총국<sup>36)</sup>을 위원회로 승격시킨 것은 2020년에 종료 예정인 ‘국가경제개발10개년 전략계획’의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합영투자위원회(합투위)가 수행해온 모든 대외 경제사업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13년 10월 17일 각 道별 경제특구 개발과 외국기업 지원을 전담할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조선경제개발협회는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유치는 물론, 각종 토론회, 정보 교류,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로는 특구정책의 확대 조치로 지방 특성별 맞춤형 소규모 특구형태도 추가로 추진하였다. 북한은 2013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지방급 경제개발구 13개를 각 도에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경제특구가 대규모 복합형 경제특구인 것에 비해,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소규모 경제특구인 것이 특징이다. 설립 목적으로는 외화획득 및 지방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술획득, 주민생활향상에 이바지 할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지역적 특색을 활용해 농업, 관광,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북중 접경권 5개, 서해권 3개, 동해권 5개 등 총 13개를 개발<sup>37)</sup>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 국가경제개발총국은 2011년 결성된 ‘국가경제개발10개년 전략계획’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국가경제개발전략 대상을 실행하는데 나서는 문제를 총괄하는 기구임.

33) 2013년 10월 노동신문은 신의주 및 기존 나선, 황금평, 금강산, 개성공업지구가 포함된 14개 중앙급 경제특구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힘. 【별첨 3】 참조.

〈 북한의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현황 〉

지방급 경제개발구		주요 산업	면적(km <sup>2</sup> )	투자액 (억달러)
북 중 접 경 권 (5개)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	- 현대농업 <sup>34</sup> , 관광휴양, 무역 등	6.6	2.4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등	3.0	1.2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	- 광물자원가공, 기계설비 제작 등	3.0	1.5
	함경북도 온성섬관광개발구	-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 등	1.7	0.9
	양강도 해산경제개발구	-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2.0	1.0
서 해 권 (3개)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	- 수출가공, 관광휴양, 무역 등	2.0	0.8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	- 휴양, 체육, 오락 등 복합 관광지구	8.1	1.4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	- 수출 가공조립업 등	1.5	1.0
동 해 권 (5개)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	- 정보산업, 경공업, 광물자원 활용 등	2.0	1.0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	- 보세가공, 화학, 건재, 기계설비제작	2.0	1.0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	- 현대적인 농업개발구 건설	3.0	1.0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	- 금속가공, 경공업, 수출가공업 등	5.4	2.0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	- 현대적인 농업개발구 건설	4.0	0.7

- 관리기관 : 국가경제개발위원회, 각 도 인민위원회 경제지대개발국
- 투자근거 : 경제개발구법
- 협력기간 : 총 50년
- 협력방식 : 합영개발기업 또는 외국투자자의 단독개발기업 설립 방식
- 우대조치 : 기업소득세 14%, 특혜관세 등
- 총 투자액 : 약 16억 달러 (지방급 경제개발구 당 평균 1.2억 달러)

자료 :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투자제안서.

34) 현대농업이란, 기존의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농업과 축산 결합)를 바탕으로 농업과학연구기지(채종 및 육종), 박막온실 등 현대식 채소재배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농업방식을 말함.

## 최근 북한 경제정책 평가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은 과거에 비해 대내 경제개혁을 촉진시키고, 대외 개방정책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 번째, 경제운영시스템 강화 측면에서 경제부처의 권한을 확대했다. 최근 북한은 주민생활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내각책임제를 강화했고, 이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북한은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책임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경제전문관료를 요직에 기용했고, 당·군·정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국가재정을 내각에 집중시켰다. 이는 북한식 '정경분리(政經分離)'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우선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운영 중심의 내각책임제가 지속될 경우 생산요소의 경제부문 투입 확대로 북한 경제 회생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경제회생 우선 정책은 남북한 경제력 격차 해소 및 북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 투자비용' 등 통일비용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인센티브와 자율성 도입 확대 등 시장경제 시스템 강화는 기존의 중앙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시장경제 체제 도입 확대는 생산성 향상과 산업 생산량 증가<sup>35)</sup>, 나아가 경제 체질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 확산은 단기적으로는 농업·경공업 부문의 회생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강화와 산업 구조 고도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된다. 농업, 경공업 회생을 통한 자생적 생산기반 확충은 중장기적으로 중화학공업, 첨단산업으로의 산업 고도화의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점진적 시장경제 시스템 도입은 본격적인 시장경제 전환에 따른 부작용 완화와 남북 간 이질적인 제도를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제도통합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세 번째, 경제개발구법 제정 및 전국 단위의 맞춤형 경제특구 확대 등은 보다

35) 실제로 2013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6.28 농업개혁 조치에 따른 시비량 증가 및 관개시설 확충, 양호한 기상여건,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음.

적극적·현실적인 외자유치 정책으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없었던 3통 자유 보장, 경제개발구법 제정을 통해 경제특구 정책의 통일성 확보, 신규 경제개발지구 출범 등은 이전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및 종합개발형식의 중앙급 중심의 경제특구 정책을 벗어나, 해당 지역의 산업과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지방급 특구개발은 실현가능성을 높인 맞춤형 개발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외 개방 확대는 글로벌 경제 편입과 통일 인프라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국제 수준에 맞는 법·제도 준비는 외자유치를 통한 자본 확충은 물론, 북한경제의 글로벌 경제 편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맞춤형 경제특구 정책은 지역의 생산기반 확충에,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인프라 개선은 통일인프라 조성에도 보탬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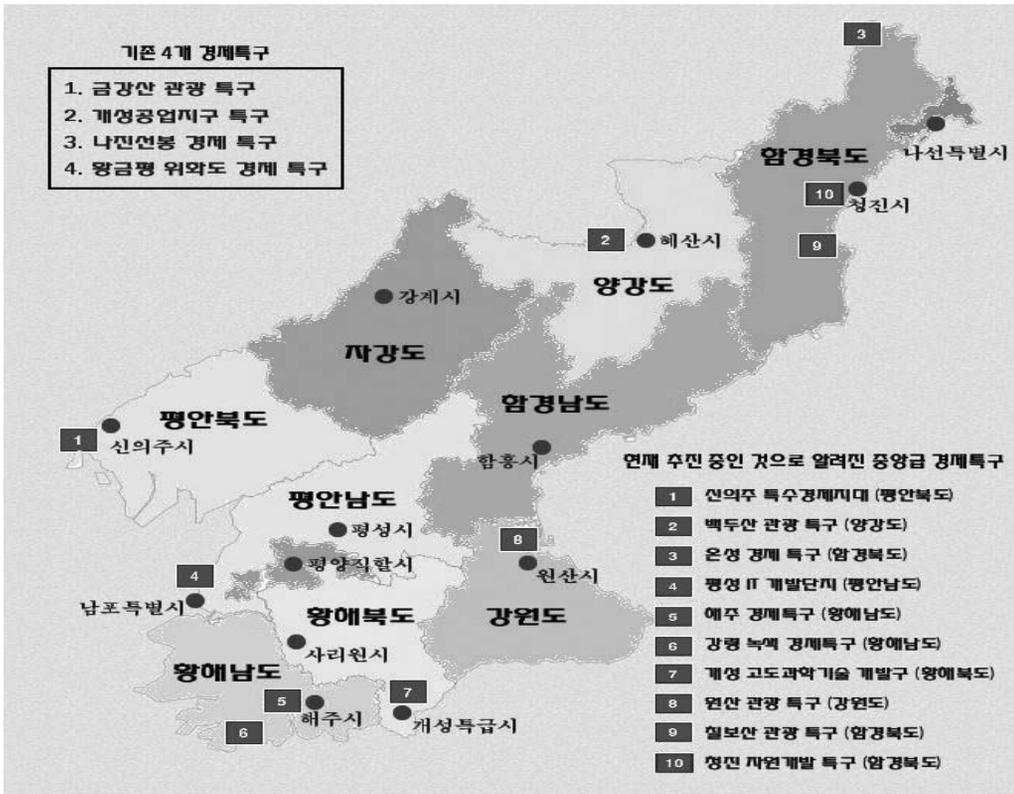
〈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이 통일기반 조성에 미치는 영향 〉



### 【별첨 3】 북한이 추진 중인 중앙급 경제 특구 현황

○ 북한은 앞서 발표한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병행하여 새로운 중앙급 경제 특구를 개발할 계획인

- 기존의 4개 경제특구를 비롯해 10개의 신규 중앙급 경제특구 계획 중
  - 신의주 특구 : 2012년 홍콩 다중화 국제그룹과 계약 체결, 금융·무역·관광 등의 경제특구 개발 계획, 82km<sup>2</sup> 규모에 투자액은 1,000억 달러로 예상
  - 원산 특구 : 마식령 스키장을 포함, 종합관광지로 개발될 원산 특구의 개발대상규모는 약 414.8km<sup>2</sup>, 예상 투자액은 78억 달러 수준
  - 강령 특구 : 황해남도 강령군에 산업, 관광 등의 경제특구를 조성할 계획
  - 이외에도 북한은 해주, 온성 등에 경제특구를, 백두산, 칠보산 등에 관광특구를 조성할 계획



자료 :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투자제안서.

## V. 정책 대응 방향

통일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적 미래 달성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협력과 노력 뿐 아니라 대내외 공감대를 확대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남북한 공동의 통일 한국 비전 모색 및 단계적 실현 방안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통일 한국 비전 모색을 위해 달성 가능한 통일 한국의 경제적 수준이나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등을 포함, 통합방식에 따른 통일효과에 대해 보다 정밀한 예측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 전 및 통일 후 남북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위한 비전 마련 측면에서 통일효과 예측을 바탕으로 남북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일 한국의 비전을 수립함으로써 통일 한국의 발전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협력 분야를 발굴·추진함으로써 통일 비전 달성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는 물론 경제·사회 각 분야의 운영체계가 완전히 다른 남한과 북한이 통일 후 최대의 시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노하우와 베스트 프랙티스를 축적해야 한다.

둘째, 통일 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향후 자본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지역에 대한 자본 투자 증가가 남한 지역의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정부 주도의 자본 투자는 조세 및 정부부채 등 재정적인 부담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간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 등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소득격차 축소 및 통일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 먼저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을 고려한 남북경협 추진이 요구된다. 북한의 풍부한 인적 자원·지하자원과 한국의 자본·기술력이 결합하여 전 산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남북협력기금 활용도 제고 및 對北 국제금융 유입 활성화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양허성 자금을 받거나 장기저리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해야 한다. 한편 선제적 대북투자로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및 이를 통한 통일비용 확보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선제적 대북투자는 북한의 對 중국 의존도 축소를 비롯해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다.

넷째, 북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 발전 로드맵 준비 및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을 위한 생산·물류·시장 구축·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 후 북한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1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중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남한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산업 발전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독일 사례에서 보듯 북한과 육상교통으로 연결 가능한 극동러시아, 중국, 몽골 등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과의 경제 협력 및 교역을 통해 시장과 생산기지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 극대화의 핵심이다. 따라서 유라시아권 전역에 대한 생산·물류·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통일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확대 노력 지속될 필요가 있다. 우선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확대가 요구된다.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는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우호감을 증진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통일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된다. 또한 문화, 학술 교류를 비롯해,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공동입장,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으로 북한 변화 분위기 유도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제정 및 전국 단위의 경제개발구 확대 등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과 변화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통일은 북한 경제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이라는 인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 공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 한국의 정치·경제적 편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제고 노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통일이 주변국에 주는 정치·경제적 이익을 적극 홍보하고 통일 우호적인 국제사회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9號**